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예상 의제와 한국의 기여 방안

급변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과
새로운 비전의 요구

부산총회 예상 의제:
'Aid and Beyond'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기여 방안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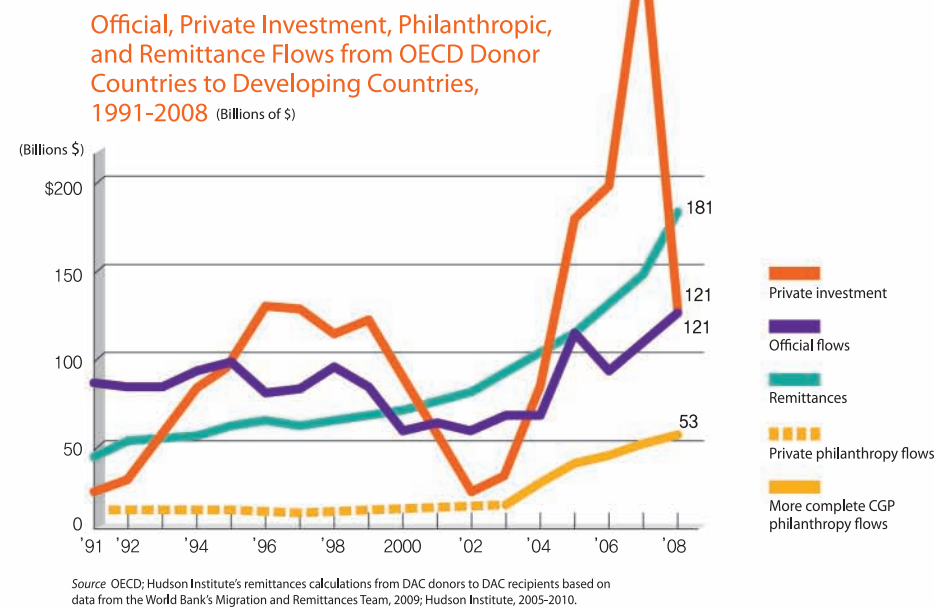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 국제 개발협력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 온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은 오늘날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원조와 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총회의 의제는 'Aid and Beyond', 즉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개발 자원의 활용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논의의 분석 결과, 수원국 주인의식의 핵심적 위치, 역량강화의 중요성, 개발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의 필요성 등이 주요 시사점으로 요약된다. 부산총회 주최국으로서, 또한 DAC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이러한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통해 그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이상 원조만이 아닌, 수원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환경 조성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KOICA 차원에서는 수원국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개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파트너십 전략 체제를 확고히 하고, 역량개발 등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과
새로운 비전의 요구

2005년 채택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은 지난 수년간 국제 개발협력의 기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성과중심의 원조, 상호 책임성의 5가지 원칙하에 수립된 12개 지표별 목표와 성과 모니터링 체계로 구성되는 동 선언은 국제 개발협력과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파리선언 체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유럽 중심의 선진공여국과 다자기구가 주도해 온 것으로서, 대다수 개도국과 신흥공여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한편으로는 원조의 효과성 증진이 개도국의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문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기존 원조효과성 체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¹⁾. 오늘날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란 수많은 개발 관련 자원의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ODA에 관한 조치만으로는 개발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1. 다양한 개발 관련 자원(1991-2008)]



▶ 출처 | Hudson Institute: 14

파리선언에 이은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이하 AAA)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고취와 역량의 강화, 남남협력의 확대,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기존 파리선언 체제를 일부 보완하는 한편, 광범위한 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여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부산총회)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원조라는 협소한 개념을 넘어서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개발과 연계된 ‘개발효과성’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부산총회 예상 의제: ‘Aid and Beyond’

부산총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요약하면 ‘Aid and Beyond’, 즉 원조(Aid)와 원조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개발(Beyond)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다시 말해, 원조라는 특정 재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혹은 국가 단위의 ‘개발’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개발재원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원조(Aid)

‘Aid’란 말 그대로 원조와 기존 원조효과성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부산총회의 논의 방향이 ‘Aid and Beyond’라는 통합적 틀이라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금번 회의에서 거시적 개발 관련 담론의 부상이 원조의 역할을 평가절하하거나 기존 원조효과성 체제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산총회는 파리선언 이행의

최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원조의 제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개발이라는 거시적 맥락 하에서 원조에 관해 발전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핵심 안건으로는 주인의식, 원조일치, 성과중심의 원조, 상호책임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실시된 2010년 제3차 파리선언 이행 성과 모니터링 결과가 그 논의의 바탕이 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총체적 분석은 모니터링 결과 분석이 나오는 오는 7월, 본지 제2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거시적 개발의 이슈 (Beyond)

① ‘개발’이라는 궁극적 목표

한편, ‘Beyond’란 원조를 넘어서는 개발이라는 거시적 맥락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개발협력 담론에서 부산총회를 혁신적 이정표로 만들 개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 첫 번째는 ‘개발’이라는 거시적이고도 포괄적인 목표다. 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²⁾,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개발과 원조 활동의 목표점이 더 이상 원조의 효과적 집행이 아닌 ‘개발’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파리선언 원조효과성 체제는 효과적으로 제공된 원조가 개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³⁾ 다시 말해, 개념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과 ‘일을 옳게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이 동등한 의미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거시적인 개발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 목표를 개발성과 창출에 두고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원조가 기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원조효과성 체제보다 좀 더 거시적인 개발성과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즉, 효과적으로 집행된 원조는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 요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집행된 원조 뿐 아니라 기타 자원과 정책적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주체

두 번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주체를 들 수 있다. 부산총회에서는 ODA라는 특정 자원의 흐름만을 다루던 기존 원조효과성 관련 논의를 넘어서서, 각종 개발 관련 재원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을 위한 자원에는 DAC 공여국과 다자기구에 의한 ODA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도 조세와 국내투자를 통해 창출된 수원국내 자원, 신흥공여국의 원조, 민간개발원조(Private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PDA), 민간투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및 해외송금 등 여러 자원이 존재한다. 아울러, 개발 주체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결국 다양한 개발주체와 자원 모두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최대한의 개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정책도 중요하다: ‘정책정합성(PCD)’

세 번째,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원조 등 각종 자원 뿐 아니라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개발을 위한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정책 이슈는 현재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정책정합성이란 각종 국가 정책이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치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원조를 제외한 나머지 99.8%를 개발을 위해 일치시키는 것”⁴⁾이라는 국제 시민단체 연대 Better Aid의 표현에서 그 함의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림 2. 부산총회 예상 의제 구성]



▶ 출처 | 저자 작성

정책정합성은 선진공여국의 정책 혹은 개도국의 국가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잘 정의되고 합의된 개발 목표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성과가 촉진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일례로 차드는 여러 공여국의 지원 하에 면화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소득 창출을 모색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정부가 자국 면화사업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농업 보조금 및 수입 작물 관세 등의 정책이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다른 예로, 이민을 통한 해외송금 확대가 필리핀 등 개도국의 국가 재원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이민 장려 정책은 고급 인력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역량 구축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결국 개도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원조 등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책이 개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정합성은 1990년대 이후 오랜 세월을 걸쳐 구축되어 온 개념으로서, DAC 회원국에 대한 동료심사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발협력 분야에서 완전히 생소하기만한 이슈는 아니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정책정합성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첫 번째, 공여국내 각 정부 부처 정책이 개발 및 원조 정책과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정부 부처 간 개별 원조사업 통합에 관한 원조 분절화 해소 뿐 아니라, 안보, 무역, 에너지 등 각종 정책과 개발 정책 간 합치 역시 포함된다. 두 번째, 공여국과 공여국간 개발 정책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파리선언에서 강조되는 원조 조화(Harmonization) 원칙과 맞닿아 있다. 세 번째, 공여국 원조 및 개발정책과

수원국의 개발정책의 일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파리선언 원조일치(Alignment) 원칙과 동일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전략이 수원국내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각도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원을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정합성 논의의 핵심이자 부산총회의 주요 사안이다.

정책적 시사점

① 수원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파리선언 체제는 지표상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 상호책임성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원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실시하고 재원을 집행하느냐 보다는 공여국 원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측면이 크다. 반면 'Aid and Beyond' 담론은 수원국이 개발 프로세스의 일차적인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개발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정책적 수단과 국·내외 재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원국이 최적의 주체인 동시에, 유일한 주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개발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구어 가야 하는 것으로서, 수원국이 자국의 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여국 등 외부 주체의 역할은 2차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수원국 주도의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원국 거버넌스와 역량강화의 중요성

이렇듯 수원국 주인의식이 기반이라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이에 부합하는 국가 조직적·인적 역량의 강화이다. 수원국 거버넌스와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주인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제사회 개발협력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던 수원국 주인의식은 단순한 의식 개혁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수립과 집행 등 각종 행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며, 개발관리 역량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매개체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여기서의 개발관리 역량이란 국가 개발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합리적 조세정책 등을 통해 국내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국가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내 결집을 유도하는 등 포괄적 개발목표를 총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뜻한다. 이는 그간 국제 원조사회 주요 담론 중 하나인 역량 개발 및 거버넌스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③ 촉매재로서의 원조 (Aid as a Catalyst)

이러한 수원국 주도의 개발 프로세스에 있어서 원조는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수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2차적 보충·보완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결국 개발이라는 것은 개도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며, 원조는 개발재원의 일부를 제공하는 부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개발이라는 성과물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원조는 단순히 재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나아가 개발을 촉진(Aid as a Catalyst)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 총회를 통해 새로이 조명하게 될 원조의 역할에 관한 담론의 핵심이다.

개발을 위한 촉매재로서의 원조는 보완재(Complement)이자 촉진재(Leverage)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완재로서의 원조는 G-20 개발의제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수원국 자체 재원과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혹은 사업을 보충, 보완

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원조는 수원국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정책을 유도하고 관련 재원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원조가 수원국의 자체 국가 전략에 기반을 두고 수원국의 재정관리 시스템, 조달 체계, 평가 체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 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원조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집행하여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파리선언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울러 'Beyond'에서 논의될 거시적 개발 이슈와 'Aid' 이슈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④ 개발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다양한 개발주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수원국내 재원, ODA, 남남협력, PDA, FDI, 해외송금 등 다양한 재원간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원국과 DAC 공여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공여자-수원자 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다양한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여 개발을 극대화해 낼 수 있는, 통합적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의 기여 방안과 향후 과제

① 의제 형성 주도

그렇다면 총회 개최국으로서, 그리고 선진공여국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프로세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향후 과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국은 주최국으로서, 부산총회를 계기로 재편될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 이미 금년 초 우리가 부산총회 의제 안으로 제출했던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변화'라는 주제는 'Aid and Beyond' 프레임워크의 핵심 사안과 맞닿아 있으며, 부산총회 결과문서 초안 등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조효과성 논의가 서구 공여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상황에서, 부산총회를 계기로 개발협력 논의에서 한국이 좀 더 개발도상국과 신흥공여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정책정합성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공여국 역할이 다소 강하게 부각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개발관리 역량강화 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원국에 의한, 수원국을 위한 개발과 원조가 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의 틀을 세우는 조타수로서의 역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Aid and Beyond' 프레임워크의 핵심 개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일관된 견지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발'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지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관계자간 협의를 통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② 한국 개발경험 교훈의 활용

두 번째, 이러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재구성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 개발경험을 개발효과성 성공 사례로 활용함으로써, 부산총회를 계기로 새로이 형성될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수원경험 혹은 개발경험에 관한 부분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실시되어 왔으나, 총체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총회 준비 차원에서라도 개발을 위한 정책 원칙, 민·관 협력,

국내 재원의 조달, 국제 통화 및 거시금융 정책의 영향 등 원조 그 이상의 요소들이 원조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여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우리의 경험에 대한 단순한 미화가 아닌 냉정한 연구·분석을 통해 총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⁵⁾ 이를 통해 우리 개발경험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표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학술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정책정합성 등 개발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

세 번째, 우리의 개발협력 방향 수립에 있어서, 이제는 원조뿐 아니라 정책정합성 등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당장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DAC 동료 심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부터 정합성 이슈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선진공여국으로서, 단순 재원과 기술력을 제공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개도국의 자생적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개발협력 비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 부처 간 원조와 관련 정책의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타 공여국과의 조화를 꾀하는 동시에 수원국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조, 개발정책,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⁶⁾ 정책정합성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분석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④ 수원국 주인의식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한 KOICA의 과제

마지막으로 KOICA는 부산총회 논의결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 수행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발원조 사업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개발관리 역량강화와 주인의식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식공유 촉진, 국가 기간역량에 대한 지원 강화, 인적자원과 조직역량에 대한 통합적 접근 등을 통해 기존 역량개발 사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원국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수원국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별지원체제를 좀 더 수원국 개발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작성 | ODA연구실 이현주 상임연구원(hrhee@koica.go.kr)

- 1) 지난 십여 년간 남남협력과 민간개발원조(PDA)의 급격한 증가와 국외송금, 해외직접투자(FDI) 등의 확대는 개발관련 재원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상대적 비중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림 1 참조]
- 2) 유엔 천년개발계획(MDGs), 사회적 안정, 인권 보장,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 '개발'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와 경제를 보는 상이한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 3) DAC 차원에서도 파리선언 체제 평가연구를 통해 파리선언 원칙에 준거하여 집행된 원조가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지 그 연결 고리를 밝혀내고자 했으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다.
- 4) 선진국의 ODA 규모가 GNP의 0.2%라는 추산에 바탕
- 5) KOICA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이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성과는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5회 서울 ODA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며, 최종 연구결과는 2012년 출간될 계획이다.
- 6) OECD는 정책정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블록으로 구성된 정책정합성 주기를 정착시켜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문서를 구축하는 일이다. 두 번째,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을 통해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세 번째, 정책정합성을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수립하여 정책 조화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 그림3 출처 | OECD (1996), Occasional Papers NO12 Building Policy Coherence, Tools and Tensions



참고 문헌

- ODA Watch (2011), 개발효과성은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인가?, 연재기사 2호
- Hudson Institute (2010), The Index of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2010
- Kharas, H. et al. eds. (2011), Catalyzing Development: A New Vision for Aid,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Kindornay, S. (2011), From Aid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A Working Paper, The North-South Institute
- ODI (2007), Beyond-Aid Policies and Impacts: Why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is Important, Opinion 79
- OECD (1996), Occasional Papers NO12 Building Policy Coherence, Tools and Tensions
- OECD (2008), The Paris Declaration, Aid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 OECD (2009), Building Blocks for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논의 동향

OECD-DCD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3.9-10)

부산총회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금번 집행위원회에서는 부산총회 주제를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서는 보다 넓은 맥락의 개발효과성으로 확대한다는 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밖에도 부산총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부산총회 결과문서 구성요소가 도출되고, 행사준비, 홍보 차원에서 각종 세부 계획이 논의되었다.

OECD-DCD 고위관리회의(4.6-7)

고위관리회의에서는 부산총회의 정치적 성격과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DAC Statement on Welcoming New Partnership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새로이 형성될 패러다임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DAC를 개혁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